

# 아우 밥그릇 뺏어 형님에게… 교육계, ‘교부금 개편’ 반발

&lt;초·중·고등&gt;

교육·기재부, 특별회계 11.2조 편성  
고등교육특별회계 필요성은 공감  
“학령인구 줄었지만 학급 수 늘어”

정부가 그동안 초·중등 교육에 쥐었던 예산 일부를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에 쓰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화하자, 초중등 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초·중등 예산 일부 대학에 지원… 약 11조2000억 규모 편성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고등교육(대학) 재정 확충 방안과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유·초·중등 예산으로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평등교육으로 넘기는 고등교육특별회계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은 그에 대한 세부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관련법 제·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를 전제로 한다.

장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초중등 교육에 주로 사용하는 교부금 재원을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 상생 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15일 국회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유·초·중등 교육 예산 축소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신하은 기자

편성했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와 관련한 법안과 예산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되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기존 사업 중 교육부 및 고용부의 고등교육 지원 사업을 포함해 약 8조원 수준의 예산사업을 특별회계로 이관한다. 더불어 초·중등 예산으로 사용되는 국세 교육 세 전입 등을 통해 3.2조원 수준의 재원을 고등·평생교육의 4대 핵심 분야를 중

심으로 대학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결과적으로 총 11조 2000억이 고등교육특별회계로 편성된다.

고등교육특별회계 편성이 발표되자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11.2조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편성을 통해 대학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고등교육재정 규모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비, 손대지 말라”

… 교육 교부금 지키고자 10만여명 서명

초중등 교육계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같은 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은 이날 오전 10시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 교육은 거의 모든 국민의 받아야 하는 보통교육”이라며 “정부는 국가 책임 교육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고등교육특별회계의 필요성은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이번 편성은 유·초·중등 교육비의 축소를 통해 마련돼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현재 교육분야 재정 투자는 초·중·고등 분야에 몰려 있어 문제가 됐으며, 초·중등 예산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비례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초·중·고등 교육계는 학령인구는 감소했지만 교육재정 수요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학급 수는 늘어 교육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같은 날 국회 앞에서 ‘유·초·중등 교육예산 축소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서명 결과를 국회 예결산위원회에게 전달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 교육재정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 기준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도 필요한 교육예산은 줄지 않는다”며 “인구수 감소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임에도 타 부처 예산은 그대로 두면서 학생들의 예산만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지방대 위기 극복’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

교육부, 결손 인원 초과해 자율 배분  
의학·약학 등 모집단위 적용 제외

교육부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일부 학과에서 편입학 인원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정원 내 편입학은 각 대학의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의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이 발생한 만큼 각각 선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을 통해 지방대학은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을 초과해 자율 배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학, 약학, 간호, 사범 등의 모집단위는 적용이

제외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에 한해 우선 시행하고, 제도 개선 효과 등을 분석해 수도권 대학으로의 확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또한 대학규제개선 협의회, 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지방대학의 편입학 모집인원은 2022학년도 기준으로 2만6031명이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부터는 지방대학들이 편입학을 통해 강점 분야의 인원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게 됐으므로 사회 수요

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단기간(2~3년)에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편입학의 경우 3학년으로 모집돼, 신입학 대비 1~2년 빠르게 해당 분야의 인력 배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지방대학이 자율적인 특성화를 추진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등과 더불어 각종 규제 완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지방대학 시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에 지방대학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 학생 위생수준 개선됐지만 비만 늘었다

교육부, 건강검사표본통계 결과

학생들의 건강검사를 실시한 결과 손씻기 실천율·구강 관리상태 개선됐지만, 비만과 시력 이상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교육부는 2021년 실시한 학생 건강검사표본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학생 중 비만 학생 비율은 2019년 대비 3.9%p(연평균 1.95%) 증가한 19.0%이며, 과체중 학생 비율은 1.1%p(연평균 0.55%) 증가한 11.8%로 비만 학생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학생들의 영양섭취 및 생활습관(신체활동, 인터넷 사용, 개인위생 등) 등

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 결과를 보면, 2019년 대비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튀김 등) 섭취율’이 높아진 반면, ‘채소 매일 섭취율’은 낮아졌다.

더불어 ‘주 3일 이상 격렬한 운동 실천율’ 역시 2019년 대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소폭 상승한 반면, 중학교는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 및 게임 이용률’은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했다. /신하은 기자

## 서울시교육청 내년도 예산 12.9조 편성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1.7% 증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인 민선 3기 첫 본예산을 12조 8915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1.7%(2조 3029억원) 증가한 규모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통합교육재정 안정화기금 9700억원도 편성됐다. 이는 향후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축소에 대비해 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의 2023년 예산안의 3대 중점 영역은 ▲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모두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책임교육 강화 ▲미래교육 체계로의 전환 본격 추진’을 위해서는 총 4170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벗(디지털+벗)’ 사업을 중1에서 중1, 고1로 확대한다. 더불어 전자칠판 설치 사업도 중1에서 초5에서 고3, 특수학교 전체로 넓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교는 디지털 역량 중심의 학습환경으로 전환하고, 학생은 스스로 지식·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능동적인 학습자로 성장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3년 본 예산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고, 기초·기본학력 보장 등 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미래교육체계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둘다”며 “우리 교육이 직면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 대응해 전자칠판 설치 사업을 초5에서 고3, 특수학교 전체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대학 특별회계’ 엇갈린 반응… “즉각 철회” vs “더 늘려야”  
▲외교부 “일부 주한대사관, 이태원 희생자 명단 항의”

/사진 뉴시스

▲전북 올해 수능 한파 없어… “대체로 맑음”  
▲검찰 “민주당 대장동 수사팀 고발 유감… 정치적으로 몰고가”



▲‘노동개혁 밀그림’ 내달 13일 발표… 주52시간부터 윤곽  
▲민주노총 간 이재명, ‘노란봉투법→ 합법파업보장법’ 제안

/사진 뉴시스